

국별 리포트

폴란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5.

<목 차>

1. 경제 동향 및 전망	2
2. 정치 동향 및 전망	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폴란드(Republic of Poland)

面積	312천 km ²	貨幣單位	Zloty
人口(2007)	38.1백만 명	환율('07년, 연중)	2.77Zl/USD
GDP(2007)	4,198억 달러	會計年度	1.1-12.31
1人當GDP(2007)	11,019달러		

- 폴란드는 GDP 규모 또는 1인당 GDP 수준, 산업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상위 중소득국(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y)에 속하고 있음. EBRD 및 OECD에 따르면, 동유럽 체제전환국가 중에서 시장경제단계(no longer in transition)에 있는 국가로 분류됨.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국가 가운데 최대의 경제 및 인구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1996년 OECD, 1999년 NATO 가입한 이후 2004년 5월에는 EU에 가입함.
- 정치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PiS당)이 승리하였으나, 2006년 11월 지방선거 이후 당시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PO)의 승리로 연정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2007년 9월 연정붕괴와 조기총선 합의에 따라 실시된 조기총선('07.10)에서 PO당이 승리(정권 교체)함으로써 농민당과 연정을 구성함.
- 2004년 EU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규모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도 높은 국가신용도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임. 2010년 이전 유로화 도입 가능성은 낮으나 친 EU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 EU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1.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e	2008f
경제성장률	5.3	3.6	6.1	6.5	5.1
재정수지/GDP	△4.8	△3.5	△3.2	△2.5	△2.0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1	1.1	2.4	4.0

자료: IMF, IFS, 2008 및 EIU, Country Report: Poland, Apr. 2008.

□ 경제성장·투자, 뚜렷한 증가세 시현

- 2006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유로존)의 경기호조로 인한 수출증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FDI 유입증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함.
 - 2005년 이후 제조업, 광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수출 호조 및 자본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EU 가입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기계·설비 등 자본재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현저한 상승추세를 보임.
 - 풍부한 숙련 저임 노동력,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법인세 인하('04: 27% → 19%)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및 EU 가입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으로 FDI 유입규모는 2005년 96억 달러에서 2006년 145억 달러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함.
- 2007년 상반기에는 건설(주택) 및 유통부문, 고정자본투자 및 민간소비 부문의 급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7.1%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은 둔화되어 연중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에는 실질임금 상승 및 노동시장 여건개선 등으로 민간부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유동성위기에 따른 금리 인상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됨. 또한, 금리 인상, 임금 상승, 해외수요 위축, 즐로티(Zloty)貨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긴축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연중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관리 가능한 수준

- 2006년에는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세수증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3.2%로 개선됨.
- 2007년에는 7월부터 발효되는 사회보장부담금 감축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에 힘입어 연말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치인 300억 즐로티(107억 달러 상당) 이내로 억제되면서 **GDP 대비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에는 부양가족 세금공제, 사회보장부담금 추가감축 등이 예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적자개선 여부는 재량적 예산지출에 대한 시민강령당(PO)의 효과적 통제에 달려 있음.
 - 유럽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르면,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을 60% 이내로 억제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동 비중이 4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폴란드는 2004년 가입 EU 10개 회원국 가운데 EU 원조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동 EU 지원자금은 경제현대화 등을 위하여 투입됨. 2004-06년 EU 기금의 폴란드 배정액은 128억 유로이며 2007-13년 EU 예산안은 8,620억 유로로 2005년 12월에 최종 합의되었음. 이중 597억 유로의 구조조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910억 유로가 배정되어 폴란드 투자수요의 신규 재원으로 활용될 것임.

□ 소비자물가, 점진적 상승 전망

- 2006년도에는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통화강세 지속, 3/4분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를 기록함.
-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소매 판매 실적 증가, 임금 상승 및 고용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8년에는 영국 등 EU 회원국으로의 근로자 이주에 따른 실업자 감소 등으로 가속화된 실질임금 상승, 생물연료(biofuels) 수요 증대 등에 기인한 식료품가격 인상(구조적인 문제)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나. 경제정책

□ 2007년 10월 정권교체로 경제정책 선회

- 지난해 10월 21일 조기총선에서 중도우익 성향의 시민강령당(PO)이 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는데, PO당은 기업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지향함.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11월 23일 의회 정책연설에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간섭을 줄이고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폴란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로화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표함.
- PO당은 공공지출 통제, 재정수입 증대, 공적채무 감축, 인플레이션 억제 및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로화 도입 등 대 EU 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금년도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PO당이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조세 인하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은 재정수지 적자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표 2> PO당의 경제정책에 관한 선거공약사항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재정개혁 추진(재정적자 축소)
- 15%의 단일세제 도입(현행 누진세제 대신), 사회보장부담금 감축
- 국영기업 민영화 완료(PiS 정부 지연사업)
- 에너지부문 경쟁력 제고
-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호의적 정책접근

○ 2005년 9월에 집권한 PiS당은 동년 11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재정수지 적자 억제, 개인소득세 등의 조세제도 개선, EU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국영기업의 민영화추진 등의 경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 PiS당 소속의 카진스키(Jaroslav Kaczynski) 총리의 전 정부는 사회후생에 중점을 두면서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였음.

□ 2007년 4월 이후 정책금리 인상 지속

○ 2006년 1월 통화당국(MPC)이 정책금리(reference rate)를 25bp 인하(2005년 3월 이후 5차례에 걸쳐 200bp 인하)하여 4%로 낮추었으나 3월에는 금리 추가하락 대신 동결을 선언함.

○ 그러나 2007년 4월,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지난 3년간 최초 인상 전환)한 데 이어, 동년 6월 말 다시 25bp 추가 인상 등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함(2008년 5월 현재 정책금리: 5.75%).

○ 통화당국은 최근 국제유가 및 임금 상승,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이 잠재되어 있는데다 글로벌 유동성경색으로 당분간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 경제개혁, 추진 지연

○ PiS당이 SD당, LPR당과의 공조로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통합 노력이 소수연합 정권으로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시장경제

구조적 개혁 자체가 지연되어 왔음. 2007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PO당은 민영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추진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체 생산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공공부문(1,200개 업체)의 민영화가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말 이전 Enea (발전 및 송전), Bogdanka(석탄광산) 등을 민영화할 계획임.

다. 국제경제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e	2008f
경 상 수 지	△10,693	△4,775	△11,084	△15,493	△20,176
경 상 수 지/G D P	△4.2	△1.6	△3.3	△3.7	△4.0
상 품 수 지	△5,622	△2,766	△7,004	△12,044	△15,808
수 출	81,862	96,395	117,468	147,385	173,897
수 입	87,484	99,161	124,472	159,429	189,705
대외지급준비자산	36,773	42,561	48,484	65,746	73,729
총 외 채 잔 액	97,333	98,821	125,831	169,170	..
총 외 채 잔 액/G D P	38.5	32.6	36.9	40.3	..
D. S. R.	35.5	29.5	25.4	26.0	..

자료: IMF, IFS, 2008 및 EIU, Country Report: Poland, Apr. 2008.

□ EU 가입 이후 교역 급증

- 1991년 12월, EU와 폴란드간 EU 안정제휴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 체결 이후 폴란드의 EU 회원국과의 교역은 확대되기 시작함.
- 제조상품의 대외무역은 2004년 EU 가입 이전에 이미 무역통제가 철폐된 상태였으며, EU 회원국은 대 폴란드 무역패턴에서도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EU 시장에 대한 폴란드 수출실적이 총수출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기록을 보였지만, 낙농제품 등 특정 식품

산업은 EU 가입 이후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1/4분기 수출증가율(유로화 기준)은 전년 동기(22.6%)보다 둔화된 14.2%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수입)대상국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EU-27 14.4%(15.7%), 독일 8.0%(16.3%), 러시아 34.5%(-2.1%) 등으로 나타남.

□ 경상수지 적자보전 가능

- 2006년에는 통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회복으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자본재 수입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폭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3.3% 수준으로 다시 악화됨.
- 경상수지 추세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는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다소 만회하는 국제수지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최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소비 및 투자 수요 증대, 해외수요 위축, 통화 강세 및 임금 상승) 및 외국기업의 투자송금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의 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도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증가율 둔화로 수입증가율이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으나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생각되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점차 확대될 것임.
- 2008년에도 폴란드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과 EU 기금유입 증가로 경상이전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이나, 국제 고금리, 폴란드 내 외국기업의 이윤송금 증가 및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지속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적자 악화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차입금 상환문제 등

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이 같은 분석배경에는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작고 그 적자의 대부분이 중장기 FDI로 보전되고 있으며, 통화가치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여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임.

- 2007년 7-8월의 국제금융시장 동요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 2007년 8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FDI 순유입 규모는 148억 달러로 동기간 중 경상수지 적자분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주택시장 대출 붐으로 상업은행의 역외금융이 증가하였고 2007년 1-9월 상업은행의 외화자산이 40억 달러 감소한 반면 외화부채가 80억 달러 증가한 점이 다소 우려됨.
- 즐로티貨는 단기금리 인상으로 강세를 보여 2007년 8월 글로벌 유동성위기 이전에는 유로貨 대비 즐로티貨 가치가 3.9에서 3.75로 상승하였음. 9월에는 동 환율이 3.82 수준으로 다시 약세를 보였으나, 중앙은행의 신속한 시장개입으로 즐로티貨 가치는 다시 회복됨.
 - 폴란드가 EU의 환율조정메커니즘(ERM2)에 가입(2009년 예상)하게 되면, 외환위기 및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실질실효환율이 2008년에는 고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와 이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가 우려됨.

□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속적 유입 증대

- 1990년대 후반부터 OECD(1996), NATO(1999) 가입과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03년 민주좌파연맹(SLD) 정권의 민영화 추진 지연 및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FDI 유입은 부진하였음.
- 2004년에는 EU 가입으로 FDI 유입규모가 129억 달러로 대규모 민영화사업(106억 달러 외자유치)이 추진된 2000년 이후 최고실적을 나타냄. 2006년 기준으로 FDI 유입금액은 145억 달러(2005년: 96억

달러), 유출금액은 42억 달러로 FDI 순유입액은 103억 달러에 달함.

- 1993-2006년 누적기준 FDI 유입금액: 1,080억 달러(폴란드 중앙은행)
- 2007년 중 FDI 유입금액: 150억 달러추정(폴란드 투자유치청, PAIIZ)

- 한편, 2003-04년 포트폴리오 유입 증가는 국내금리 인상, 경제성장 회복에 따른 국가신용도 개선 및 EU 가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2006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유입금액은 17억 달러, 유출금액은 45억 달러로 포트폴리오 투자는 28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외채 비중 증가

- 폴란드의 외채 및 자본유입(은행차입)구조는 2005년에 그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상반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채권발행으로 유입된 자금이 재정수지 적자 보전 및 파리클럽 채무 상환에 투입된 반면, 하반기에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투자유입의 위축, 기업의 해외차입 감소 등으로 외자유입의 둔화가 발생함.
- 2005년에는 총수출증가율 보다는 총외채잔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개선됨. 2006년에는 정부지출 증가로 공적외채가 증대하였으나, **2007년에는 금융산업 등 민간부문의 외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채무/GDP 비율: 44.9%(2007) → 42.3%(2010)

2. 정치 동향 및 전망

가. 총선이전 정치상황

□ 2007년 연정붕괴 및 조기총선 실시합의

- 2007년 4월 PiS당 소속 Marek Jurek 하원의장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한 데 이어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써 보수우파 연정의 지속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
- 2007년 7~8월, 카진스키 총리가 Andrzej Lepper 부총리와 Janusz Kaczmarek 내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이어 SD당 소속 각료 2명(노동부·건설부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SD당은 사실상 연정에서 탈퇴하였으며, PiS당의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LRP당이 SD당과 합당(가칭 '폴란드 지위동맹')함으로써 **우파연정의 붕괴가 가속화됨**.
 - 2007년 8월 7일 SD당과 LRP당은 카진스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내각인선, 정부예산 및 사회복지 정책 등을 둘러싸고 PiS당과 연정 파트너 정당간의 심각한 정책대립과 견해차가 발생함.
- 2007년 8월 9일, 카진스키 대통령은 PO당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재와 동년 10월경 **조기총선 실시에 합의함**. 보수우파 연정이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기총선 실시에 동조하는 경향은 정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해산을 통해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나. 총선 결과분석

□ 다수정당에서 4대 정당 중심으로 하원의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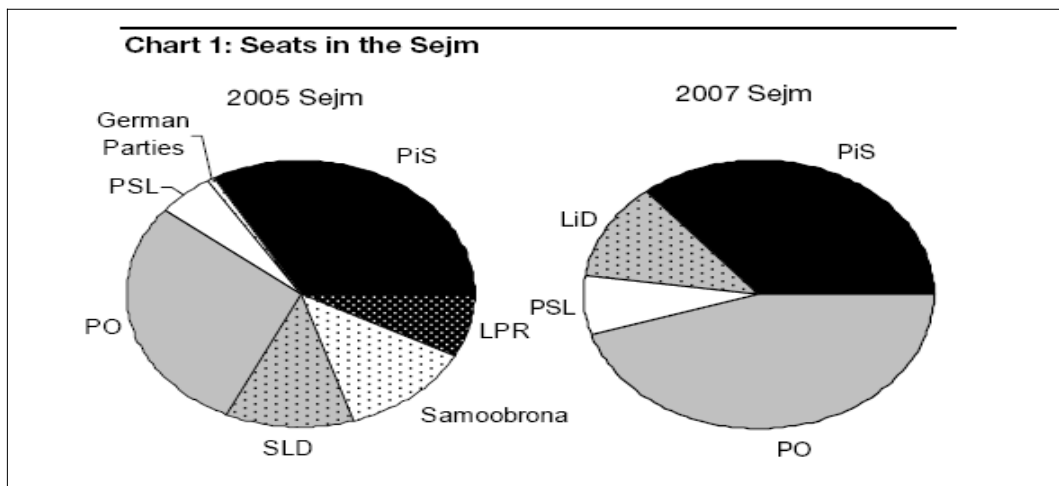
- 예정보다 2년 앞서 10월 21일 실시된 폴란드 하원(Sejm)의원¹⁾ 선거에서 중도우파 **제1야당이었던 시민강령당(PO)**이 최다 득표로 정권

1) 중선거구 비례대표제(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별로 4-10명의 의원 선출)로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 정당에 한해 선거구별로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됨. 상원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인구비례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2-4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FPTP 방식)로 선출됨.

이 교체됨. 정당별 득표율은 **PO당 45.5%**, **법과 정의당(PiS) 32.1%**, **민주좌파그룹(LiD) 13.1%**(원내진출), **폴란드농민당(PSL) 8.9%**, **자유당(SD)과 가족당(LRP)은 5% 미만으로 나타남.**²⁾

- * 보수우파 연정의 우경화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지지 유권자(도시지역 청년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됨.
- **총선 투표율은 54%**로 1989년 공산정권 붕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005년 총선 투표율은 민주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한 바 있음.
- 총 46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 PO당은 209석을 획득하여 PSL당(31석)과의 **연정구성으로 과반수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함. 반면, 총선이전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166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하원은 **11월 5일** 개원되었고, PO당은 10월 23일 투스크 총재를 총리후보로 공식 추대하였음. 또한, 카진스키 대통령의 지명으로 **11월 9일, 투스크(50)**는 총리로 확정됨.

<그림> 정당별 총선 의석 및 득표율 추이비교



2) 2005년 9월 총선에서 시민강령당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으나 도시지역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로 실제 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법과 정의당(농촌 유권자와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 지지)에 패배한 바 있음.

Table 1: Vote Results

	Sejm Seats		Popular Vote	
	2005	2007	2005	2007
Law and Justice (PiS)	155	166	27.0	32.1
Civic Platform (PO)	133	209	24.4	45.5
Self-Defense (Samoobrona)	56	--	11.4	1.53
Democratic Left Alliance (SLD)/ Left and Democrats (LiD)	55	--	11.3	--
League of Polish Families (LPR)	34	--	8.0	1.3
Polish Peasants Party (PSL)	25	31	7.0	8.9
German parties	2	--	--	--

□ 여당패배 및 야당승리 요인

○ 경제개혁 추진성과 부진에 대한 평가

- 레흐 카진스키(Lech Kaczynski) 대통령³⁾과 야로슬라브 카진스키(Jaroslaw Kaczynski) 총리가 이끄는 총선이전 정부의 선동적 대중영합주의(populism),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지식인 계층, 기업인 등 폴란드 유권자의 우려가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지난 2년 동안 보수우파 연정은 사회후생에 중점을 두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였음.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개인소득세 등의 조세제도 개선,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의 경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PiS당이 SD당과 LPR당과의 공조로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통합 노력이 소수연합 정권으로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 자체가 지연되어 왔음. 또한, 카진스키 총리는 정부 개입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민영화 추진실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음.

○ 불안한 연정구성에 따른 경제상황 변동성 확대

- 2005년 9월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PiS는 우파 소수정당

3)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되며 5년 임기로 중임 가능함.

- 들4)과 2006년 5월에 연정을 구성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권구성으로 내각인선 및 정책협의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불안한 연정을 유지함.
- PiS당이 이끄는 보수우파 연정은 예산안 처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으로 갈등을 보여 2006년 9월 SD당이 연정에서 탈퇴하여 연정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었음. 이후 PiS당이 SD당과 연정을 복원함으로써 조기총선은 피할 수 있었음. 그러나 동년 11월 지방 지자체 선거에서 PO당의 승리로 연정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함.
 - 2007년 들어 카진스키 총리가 연정 파트너 정당인 SD당 당수인 안드레이 레퍼 부총리겸 농업부 장관을 동년 7월 해임함으로써 정치권이 다시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9월 SD당(농민계층 지지) 및 LRP당(가톨릭계 민족주의 성향) 출신 각료의 전원 해임으로 연정이 붕괴되어 결국 지난해 9월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이 의결됨.5)

□ 내각인선으로 신정부 공식 출범

- 2007년 11월 16일, 카진스키 대통령이 투스크 신임 총리와 각료 18명을 임명함으로써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PO당은 지역 및 지지계층 기반이 매우 달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PSL당(하원 제4당)간의 연정을 공식 출범시킴.
 - PSL당에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을 포함한 3개 각료직 할당
 - 무소속 인사 6명, 여성 각료 5명 등 각료 평균 연령 49.5세
- 투스크 총리는 재무부, 법무부 등을 포함한 주요 6개 부처 각료를 무소속 전문가를 발탁하였으며, 여타 각료들도 대부분 소속정당내 전문가로 알려진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실무진영을 구성함.
 - 이번 총선이 반 PiS당 정서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재정개혁, 의료제도 개

4) 자위당과 가족당은 극우파 정당임.

5) 2007년 9월 7일, 제5대 하원은 찬성 377, 반대 54, 기권 20의 표결로 재적의원 2/3 이상(307)의 찬성을 얻어 의회해산안이 통과됨. 또한, 폴란드의 정국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총선이 불가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카진스키 총리와 법과 정의당은 총선이 실시될 경우 재집권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단을 미뤘음. 그러나 사실상 연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조기총선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조기총선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됨.

혁 등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부담도 큰 것도 사실임.

- 신정부는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는 한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화합·대화를 통한 EU내 신뢰회복, 대독 및 대러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내각인선에서 카진스키 대통령이 시코르스키 외무부장관, 치비온칼스키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질문제를 거론한 점 등 향후 PiS당 카진스키 대통령이 PO당 소속의 투스크 정부와 얼마나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폴란드 국정운영에 최대변수가 될 것임.

<표 4> 주요 내각인선 명단

직 위	명 단	주요 경력
총리	Donal Tusk	PO당 총재
부총리(경제부장관)	Waldemar Pawlak	PSL당 총재
외무부장관	Radoslaw Sikorski	전 국방장관(PO당)
법무부장관	Zbigniew Cwiakalski	야기엘로니안대 교수(무소속)
재무부장관	Jacek Rostowski	Pekao은행 고문(무소속)
지역개발부장관	Elzbieta Bienkowska	실레지아주 국장(무소속)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주재원.

- 지난해 10월 총선 직후 최초로 실시된 여론조사(11.8)에서 PO당 53%, 법과 정의당 25%, PSL당 11%, 민주좌파그룹 7%의 지지율을 보여 연정을 구성한 PO당과 PSL당이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 및 민주좌파그룹은 지지율 하락세를 나타냄.

다. 대외정책 및 국제관계

□ 점진적 경제개혁 추진 예상

- 친기업적 우파성향인 PO당은 폴란드농민당(PSL)과 연정으로 의회 과반수 의석을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며, 신정부는 보다 신자유노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급진적인 개혁정책

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친 기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 성향의 PO당은 EU의 통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독일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경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만, 카진스키 대통령은 의회 법안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총리(PO당)와 대통령(PiS당)간 갈등관계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PO당이 의회 법안을 크게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각 인선, 경제개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급진적인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60%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정부 집권연정의 하원의석은 240석으로 60% 의석에 해당하는 276석에 비해 36석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도좌파인 LiD당과의 정치적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임.
 - * PO당은 급진적인 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관철하기 위하여 PiS당의 일부 유명인사를 영입하거나 PiS당 의원들의 탈당을 종용할 가능성도 예상됨.

□ 대 EU 외교관계 호전

- 2005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2007-13년 예산협상 결과, 폴란드는 597억 유로의 EU 구조조정기금 수혜를 확보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 * 당시 Marcinkiewicz 총리는 취임 이후 해외 첫 순방으로 영국 Tony Blair 총리를 방문하는 등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외교관계 강화에 노력하였음.
- 2007년 6월,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U 헌법조약(the new EU constitutional reform treaty, 일명 리스본조약) 제정내용 중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의 가중다수결(QMV)* 의결제도⁶⁾ 도입 시기를 폴란드 정부의 요구대로 당초 2009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6) EU 정책결정 조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필요

- 2008년 4월 초 의회 승인 및 대통령 서명으로 폴란드는 사실상 리스본조약을 비준한 상태임.
- * 유럽 헌법조약은 2005년 부결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서 2007년 7월부터 정부간회의(IGC)를 통해 조약의 최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 후 2008년 중 회원국 비준을 거쳐 2009년 상반기 발효될 전망이다.
- 총선결과,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에 비판적인 투스크 총재의 국정 운영방향은 차기 정부의 대 EU 및 대미 외교·안보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독일 등 주변 EU 회원국들은 폴란드 총선에서 친 EU 정책을 표방한 PO당이 승리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함.⁷⁾
- 다만, 카진스키 대통령이 2010년 10월까지 임기가 헌법상 보장받고 있어 PO당 출신 총리와의 외교·국방정책 등에서 갈등이 우려되나,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은 우선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대 EU 경제협력을 통해 폴란드 실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외 경제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됨.
- PiS당의 독일에 대한 대립각 외교노선으로 폴-독 관계는 악화되었지만, PO당은 대독 관계 재정립을 선언한 바 있어 양국간 관계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대미 외교,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

- 대미 관계는 폴란드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음. 2007년 7-8월 미-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동유럽 배치 미사일방어(MD) 기지를 폴란드(요격시스템) 및 체코(레이더기지)에 설치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미-폴 양국간 군사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바 있음.
- 금년 3월, 투스크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MD 기지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실시하기로 합의(2011-13년 건설완료)하는 등 대미 관계는 상당히 진정됨.

7) 주재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차기 폴란드 정부와 유익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시민강령당의 승리를 환영하고 있음.

- 그러나 PO당과 투스크 총재는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라크 주둔 폴란드 병력의 철수를 공약하였으며,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를 폴란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안보협력 분야**에서 미국과 추가적인 협상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됨.
- 2007년 11월 17일,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900명의 폴란드 병력을 내년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카진스키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군의 조기 철수는 반대한다는 입장임.
- *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폴란드 국민의 81%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89년 11월 1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6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1989년),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이상 1992년), 문화협정(1993년)
- 교역현황 : 교역총액 38억 달러

단위 : 천 달러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1,174,964	2,613,334	3,508,775	컴퓨터·통신 부품, 승용차, TV
수 입	116,234	270,874	301,219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전동축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199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2.3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대 폴란드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나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수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함.
- 양국의 교역은 2002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수

출 9.3% 증가, 수입 56.1% 증가 이후 2004-06년에는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EU 가입 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이 9.6%에서 EU 평균치인 3.6% 수준으로 인하되어 TV부품, 휴대전화기, 선박용 엔진 등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실적은 급증세를 보임.

- 우리기업의 투자증대로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수출실적이 늘어나면서 2006년 기준으로는 아시아권에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대 폴란드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함.
- 우리나라는 폴란드 기준으로 39위 수출대상국, 10위 수입대상국임 (2006년)

□ 해외직접투자현황(2007년 말) : 369건, 11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직접투자실적은 2007년 75건 1억 2,380만 달러를 포함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11억 3,410만 달러로 5위권(선진국 제외, 총투자기준)임. 유럽·CIS 지역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내수시장이 큰 폴란드에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무역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 전자통신장비,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 기업은 LCD, 강판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폴란드가 유로 2012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로, 경기장 등 건설·플랜트 분야에도 진출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양현(☎02-3779-6663)
 E-mail : yhjo@koreaexim.go.kr